

보험계리사 시험 - 보험계약법, 보험업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1쪽

1. 상법 제4편(보험)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가계보험과 기업보험의 구분은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금지에 관한 상법 제663조를 적용하는데 실익이 있다.
- ② 공제제도는 실제로 보험사업과 같은 기능을 하는 유사보험의 일종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 계약에 관한 상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③ 무역보험은 민영보험이 아닌 공영보험이고, 특별법인 무역보험법에서 정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법 제4편의 적용이 배제된다.
- ④ 선주상호보험은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라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선주상호보험조합이 운영하는 상호보험이므로, 보험 관계의 성질에 반하거나 특칙이 없는 한 상법 제4편이 준용된다.

2. 보험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한 낙부통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해태한 때에는 당해 청약에 대하여 승낙한 것으로 본다.
- ② 보험계약은 별도의 서면 작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낙성계약으로 볼 수 없다.
- ③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인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신체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의 승낙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보험계약자가 청약 이후 보험료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손해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낙부통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상법상 보험계약에서 증명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보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②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의 존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 ③ 보험계약자가 이미 알고 있는 약관 내용과 같이 설명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 사항에 해당한다는 증명책임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 ④ 승낙 전 보험보호의 경우(상법 제638조의2), 청약을 거절할 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4. 상법상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중요한 사항이란,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평가되는 사항을 말한다.
- ② 자동차임대업자가 피보험차량을 지입차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을 받지 않고 유상운송에 제공하도록 허용한 것은 중요한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질문표가 아닌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도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 ④ 동일한 보험 목적에 대하여 체결된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는 손해보험이든 인보험이든 보험의 종류를 불문 하고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5. 상법상 손해보험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서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동차대여업자가 무면허운전자에 대하여 위조된 면허증의 복사본을 제시받고 그 원본이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중과실에 해당한다.
- ② 중과실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경우로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
- ③ 피보험자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라 할 수 없다.
- ④ 고의는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필적 고의를 포함하지 않는다.

6. 상법상 보험계약자 등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화재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상당한 변경을 가져오는 증·개축공사가 시행된 경우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에 해당한다.
- ②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보험계약 성립시 고지된 위험과 보험기간 중 객관적으로 존재 하게 된 위험에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기간 중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보험설계사가 통지의무의 대상인 보험사고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보험자가 안 것으로 볼 수 없다.
- ④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피보험자동차의 구조가 현저히 변경된 사실은 통지의무의 대상이 된다.

7. 상법상 보험자의 보험계약 해지사유는 모두 몇 개인가?

가. 미납된 계속보험료에 대한 납입 최고 후 최고에서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보험료의 납입이 없는 때  
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  
다. 초과보험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  
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해태한 때  
마. 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선박의 명칭 등에 관한 통지의무를 해태한 때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8. 다음의 사례에서 상법상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른 약정이 없으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보험가액 20억원의 가옥에 대하여, A보험회사와 보험금액 16억원, B보험회사와 보험금액 14억원, C보험회사와 보험금액 10억원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하였는데, 이후 위 가옥이 화재로 인하여 전소하자 甲은 위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한다.

- ① 甲이 C회사를 기망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 甲과 C회사 사이의 보험계약만 무효가 되므로, C회사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 납입받은 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  
② 甲이 B회사에게 20억원을 청구한 경우, B회사는 일단 20억원을 보상하고 A회사와 C회사에게 각각의 부담 부분인 8억원과 5억원을 구상할 수 있다.  
③ 甲이 A회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면, 보험가액 20억원에 대하여 B회사와 C회사가 7 : 5의 비율로 보상할 책임이 있다.  
④ B회사가 파산하여 무자력이 된 경우, 보험가액 20억원에 대하여 A회사와 C회사는 각각 16억원과 10억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9. 상법상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험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방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지급할 보험금과 상계하여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손해방지의무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손해확대의 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생겼을 때에는 손해방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③ 손해방지비용에는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한 비용이 모두 포함되므로, 배상책임보험에서 추가적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방수 공사 비용 및 누수 정밀검진 비용도 이에 해당한다.  
④ 여기서 손해는 피보험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침해의 결과로 생기는 손해는 물론이고, 보험자의 구상권과 같이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한 후에 취득한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보험자에게 부담되는 손해까지 포함된다.

10. 손해가 제3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데, 다음의 보기 중 이러한 제3자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몇 명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용자  
나. 자동차보험의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다. 자동차보험의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관리하는 자  
라. 건물 소유자의 화재보험에서 그 소유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  
마. 건물 소유자의 화재보험에서 그 건물의 임차인  
바. 건물 임차인이 건물 소유자를 위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임차인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11. 상법상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른 약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집합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하고, 이러한 보험은 그 가족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서도 체결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집합보험의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 그 물건은 보험사고의 발생 시점에 현존 하더라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양도담보 설정자의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보험자는 소방관의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도 보상해야 한다.

12. 상법상 적하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보험기간은 하물(荷物)의 선적에 착수한 시점부터 개시하지만, 출하지를 정한 때에는 그 곳에서 운송에 착수한 때에 개시한다.
- ② 하물(荷物)의 선적에 착수한 후에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험기간은 그 계약이 성립되고 운항을 시작한 때로부터 개시한다.
- ③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선박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예약으로서 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④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가액을 미리 정하지 않은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의 적하의 가액과 선적 및 보험에 관한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13. 상법상 해상보험에서 보험위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박의 존부가 2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선박의 행방이 불명한 것으로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전손(全損)으로 추정한다.
- ② 보험의 목적 전부에 대하여 위부를 해야 하지만, 위부의 원인이 그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만 위부할 수 있다.
- ③ 선박이 보험사고로 심하게 훼손되어 그 수선비용이 수선 후의 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선장이 지체없이 다른 선박으로 그 적하의 운송을 계속한 때라도 피보험자는 그 적하를 위부할 수 있다.
- ④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위부의 원인을 증명하여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4. 상법상 책임보험에서 제3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② 제3자는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임의로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 ③ 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이 보험자의 책임한도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제3자에게 이 약관 조항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
- ④ 특별한 기간의 약정이 없는 한 보험자는 피보험자로부터 제3자에 대한 채무확정의 통지를 받은 때 지체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추운 겨울에 승용차의 시동을 켜놓고 잠을 자다가 뒷좌석 부근에서 발화된 화재로 사망한 사고는 운행 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불법주차된 덤프트럭 뒤에서 길을 횡단하려고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주행 중인 자동차가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덤프트럭 운전자의 불법주차는 운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구급차로 환자를 병원에 후송한 후 구급차에 비치된 간이침대로 환자를 하차시키던 중 이를 잘못 조작하여 환자를 땅에 떨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
- ④ 인부가 정차 중인 화물차량에 통나무를 내려놓는 충격으로 인하여 지면과 적재함 후미 사이에 걸쳐 설치된 발판이 떨어지는 바람에 발판을 딛고 적재함으로 올라가던 다른 인부가 땅에 떨어져 입은 상해는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16. 상법상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험자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영업실적을 올리려고 자신의 배우자의 동의 없이 그를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로 하고 동료 직원으로 하여금 배우자를 대신하여 서명하게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 아니다.
- ②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를 그 타인이 보험청약서에 자필서명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타인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았음이 분명한 사람이 권한 범위 내에서 타인을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 그 서면동의를 유효하다.
- ④ 보험계약자가 15세 미만인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있더라도 그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17.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권 및 구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책임보험에서 구상권을 가지는 공동불법행위자는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보증보험은 보증의 실질을 갖기 때문에 구상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보험자는 공동보증인으로서 민법 제448조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재보험계약의 경우 원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서 보험자대위권을 갖고 있을 때, 재보험자가 원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대위권이 재보험자에게 이전한다.
- ④ 인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자대위권을 가지지 않으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8. 상법상 생명보험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험사고 발생에 기여한 복수의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 중 하나가 피보험자 등의 고의행위임을 주장하여 보험자가 면책되기 위해서는, 그 고의행위가 공동원인의 하나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되고 보험사고 발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 원인이었음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 ②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에서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한다.
- ③ 사망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면책되지 않는다.
- ④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한 보험약관에 의해 생명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 면책조항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한다.

19. 상법상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더라도 그러한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면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 ③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하였고 보험계약자도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 ④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한다.

20. 상법상 상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외래의 사고와 피보험자의 기왕증이 공동원인이 되어 상해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 결과인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 ② 피보험자가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구토를 하여 기도 폐색으로 질식사하여 사망한 경우 사고의 외래성이 인정된다.
- ③ 정액보험형 상해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한 결과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면 보험수익자의 지정행위는 무효가 된다.
- ④ 사고의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및 사고와 신체 손상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가 부담한다.

21. 보험업법상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종목을 추가하려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정관
- ② 업무 시작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 ③ 업무 시작 후 3년간의 추정재무제표
- ④ 경영하려는 보험업의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22. 보험업법상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에 대해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  |
|--|
| 가.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br>나. 보험계약자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br>다.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
|--|

- ① 가, 나
- ② 나, 다
- ③ 가, 다
- ④ 가, 나, 다

23.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인 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본감소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자본감소를 결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감소를 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주식회사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상호회사로 할 수 없다.
- ④ 주식회사의 조직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24.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자 등의 우선취득권과 예탁자산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계약자나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자산에서 우선하여 취득한다.
- ② 보험업법 제108조에 따라 특별계정이 설정된 경우에는 우선취득권은 특별계정과 그 밖의 계정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 ③ 보험계약자나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주식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예탁한 자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④ 보험업법 제108조에 따라 특별계정이 설정된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은 특별계정과 그 밖의 계정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25. 보험업법상 상호회사의 사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호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② 상호회사의 사원은 보험료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相計)로써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
- ③ 상호회사의 채무에 관한 사원의 책임은 보험료를 한도로 한다.
- ④ 상호회사는 정관으로 보험금액의 삭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26.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의 등록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보험설계사가 될 수 없다.
- ②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보험설계사가 될 수 없다.
- ③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될 수 없다.
- ④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보험설계사가 될 수 없다.

27. 보험업법상 보험안내자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적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1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과 다른 내용의 것을 적지 못한다.
- ②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험회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적을 수 있다.
- ③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또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이름·상호나 명칭에 관한 사항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한다.
- ④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한다.

28. 보험업법상 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보험회사는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하거나 직접 수행할 수 있다.
- ③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비용은 보험회사와 요양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 ④ 보험회사 또는 전송대행기관은 요양기관 등과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9.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와 그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대주주가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는 허용된다.
- ② 보험회사는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할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 ③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나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④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30.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제한의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보험회사의 경영능력 혁신으로 자산상태가 변동된 경우
- ②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회계처리기준의 변경으로 보험회사의 자산 또는 자기자본 상태가 변동된 경우
- ③ 보험회사가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 ④ 보험회사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출자전환 또는 채무재조정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31. 다음 중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즉시 공시하여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채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나.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다. 보험약관 및 사업방법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공시이율 등 보험료 비교에 필요한 자료  
 라. 보험회사가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 ① 가, 나
- ② 가, 나, 다
- ③ 가, 나, 라
- ④ 가, 나, 다, 라

32. 보험업법상 상호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그 업무에 관한 공동행위를 하기 위하여 다른 보험회사와 상호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기존 상호협정의 구성원인 보험회사의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고로써 갈음할 수 있다.
- ③ 금융위원회는 상호협정의 체결·변경 또는 폐지의 인가를 하거나 협정에 따를 것을 명할 경우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다.
- ④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상호협정의 체결·변경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그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따를 것을 명할 수 있다.

33. 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약관 등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할 수 있다.
-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약관 등의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대행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③ 이해도 평가의 대상자는 보험소비자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다.
- ④ 이해도 평가의 대상자에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 관련 전문가 1명이 포함된다.

34. 금융위원회가 공익 또는 건전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가. 보험회사  
 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다. 보험금을 취득할 자  
 라.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 ① 가
- ② 나, 다
- ③ 가, 나, 다
- ④ 가, 나, 다, 라

35. 보험업법상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손해보험회사는 법령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가 보험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한다.
- ② 자동차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의 경우에도 손해보험회사는 제3자가 보험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한다.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계약자로 하는 손해보험 계약의 경우 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④ 손해보험회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8호의 사유로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6. 2025. 4. 13.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가입자를 모두 고른 것은?

- 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무주택자인 그의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나.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입사후 처음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다. 2018. 4. 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가입자가 대출을 받는 경우  
 라. 가입자가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하는 경우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다, 라    ④ 나, 라

37.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하에서 '중소기업'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중소기업의 사용자 및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②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③ 중소기업의 사용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함으로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④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퇴직급여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최종 3년간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②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도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③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반액에 관하여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3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의 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자기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반기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약관 등에서 정해진 부가서비스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있는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0. 다음 중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는 모두 몇 개인가?

- 가.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자산배분 현황 및 위험·수익 구조  
 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위험등급, 손실가능성 및 과거 수익률  
 다.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라. 수수료 등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마. 예금자 보호 한도 등 가입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바.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용에 따른 퇴직연금자산의 위험도 변경 가능성

-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